

## 제13강 다중위기와 노동운동 - 인구구조 변화

김유선(2025.06.09)

- I. OECD(2025), “Setting the scene: Demographic change, economic growth and intergenerational inequalities”, *OECD Employment Outlook 2025*, (상황 설정: 인구 구조 변화, 경제 성장 그리고 세대 간 불평등)

### 요약

-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령화의 가속:** OECD 국가들은 출산율 하락과 기대수명 연장,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은퇴가 맞물리면서 생산가능인구(20~64세)가 감소하고 노년부양비가 급증하는 위기를 맞고 있다. 2060년까지 OECD 지역의 생산가능인구는 8% 감소할 것이며, 노년부양비는 2023년 31%에서 2060년 52%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 **경제 성장과 생활 수준에 미치는 타격:** 인구 고령화로 인해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2060년까지 전체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은 1.9%포인트 하락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1인당 GDP 성장률은 2010년대 연평균 1.0%에서 2024~2060년 연평균 0.6%로 약 40%가량 뚝 떨어져, 국가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 향상에 강한 제동이 걸릴 위험이 크다.
- **출산율 회복과 생산성 향상만으로는 역부족:**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은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 고령화의 큰 파도를 되돌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인공지능(AI)이나 자동화 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만으로 줄어드는 노동력을 온전히 메우기는 어려우므로, 우리 경제에 숨겨져 있는 '미활용 노동 자원'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것이 성장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열쇠이다.
- **미활용 노동 자원 동원의 세 가지 잠재력:**
  1. **이민 확대:** 이민자 수용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과거의 역사적 수준을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대폭 늘리지 않는 한 근본적인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되기는 어렵다.
  2. **성별 고용 격차 해소:** 전 연령대에서 남녀 간의 고용률 격차를 완전히 해소한다면, OECD 연평균 1인당 GDP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는 큰 잠재력이 있다.
  3. **건강한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은퇴 시기를 늦춰 고령층의 노동시장 이탈률을 OECD 상위 10% 국가 우수 사례 수준으로만 낮춰도 연평균 1인당 GDP 성장률을 0.2%포인트 이상 방어할 수 있다.
  4. 이러한 여러 전략들을 융합하여 야심 찬 목표치의 3분의 2 수준까지만 달성하더라도,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1인당 GDP 성장률 손실의 약 70%를 상쇄할 수 있다.
- **세대 간 불평등 심화의 경고:** 만약 우리가 여성이나 고령층 같은 미활용 자원을 충분히 노동시장으로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줄어든 생산가능인구가 늘어난 부양인구를 더 많이 책임져야 하므로 그 무거운 경제적 짐은 청년 세대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이는 심각한 세대 간 공정성 문제를 낳는다. 이미 지난 수십 년간 기성세대는 청년층보다 더 높은 소득과 자산 증가의 혜택을 누려왔고, 빈곤의 위험은 점차 노년층에서 청년과 아이들에게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막대한 공공 사회 지출이 노년층의 연금과 의료비로 집중되고 있어 세대 간 불평등은 앞으로 더욱 심화할 우려가 있다.

##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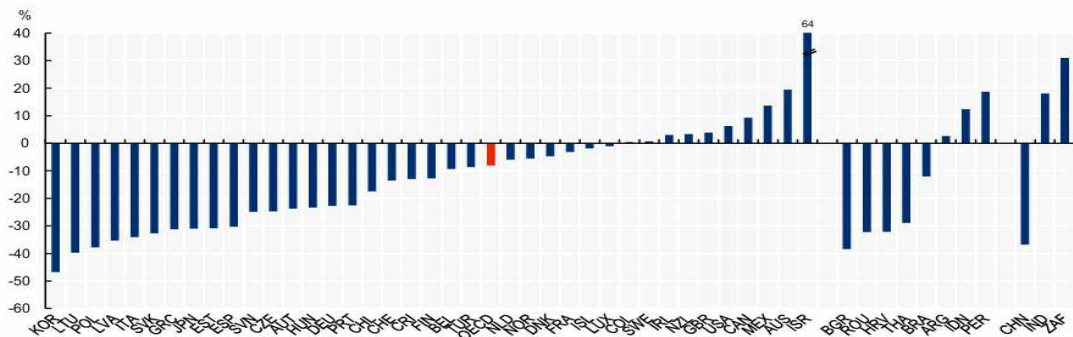
- 인구 고령화로 인한 경제 성장률 하락과 세대 간 불평등 심화를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숨겨진 노동 자원을 동원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

### 2.1 인구 고령화: 과거와 미래의 추세

- 첫째, 기대수명의 연장과 건강한 노후. 1950년 이후 OECD 국가들의 기대수명은 약 20년 늘어났으며, 연장된 수명의 대부분을 건강한 상태로 보내고 있다. 특히 60세 이후 늘어난 수명 중 70%는 질병이나 부상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는 기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둘째,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60년대 중반까지 평균 3.4명 수준을 유지하던 OECD 국가들의 합계출산율은 최근 1.5명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향후 출산율 하락세가 멈추고 안정화되더라도 기대수명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어서 인구 고령화 추세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 셋째, 생산가능인구(20~64세)의 본격적 감소. 거대 인구 집단인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시작하고 그 빈자리를 적은 수의 청년층이 채우게 되면서, OECD 지역의 전체 생산가능인구는 2023년부터 2060년 사이에 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나 동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이 감소 폭이 30%를 넘을 정도로 그 충격이 심각할 것이다.  
\* 한국 2023-2060년 생산가능인구 -46%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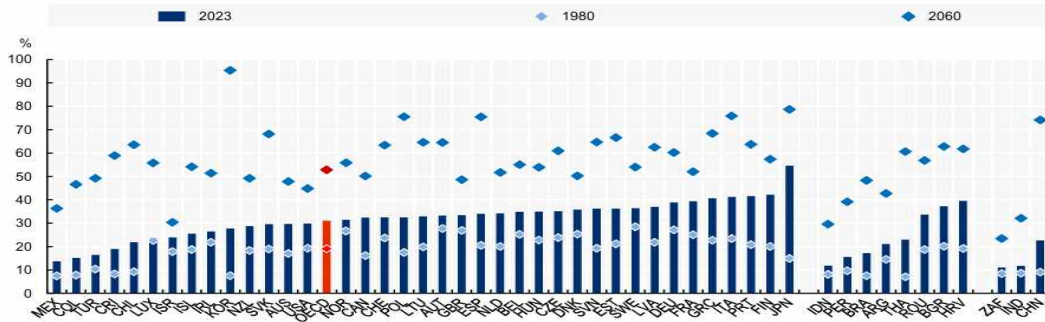
**Figure 2.3. The working-age population will decline in a large number of OECD countries**

Projected percentage change in the working age population (aged 20-64 years), 2023-60



**Figure 2.5. The old-age dependency ratio has soared and will continue to increase**

Ratio of old-age to working-age population, various years, percentages



Notes: The old-age population is the population aged 65 years or more. The working-age population is the population aged 20-64 years. 2060 data concern projections. The medium scenario of the population projections is used. OECD: Weighted average of OECD countries.

## 2.2 인구 고령화와 경제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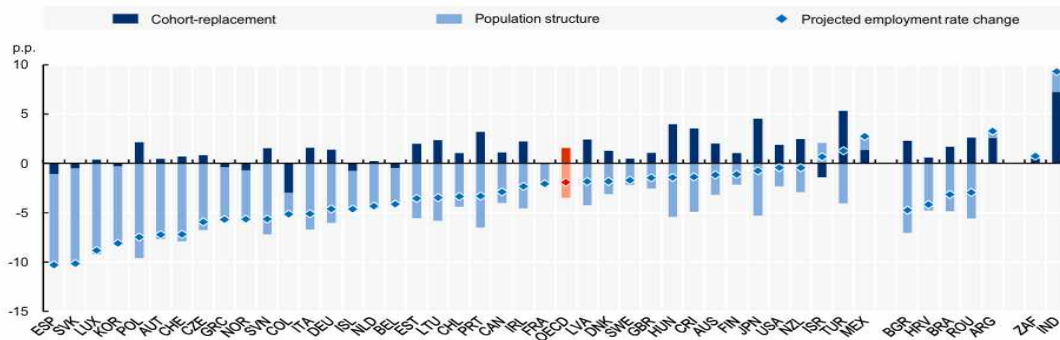
○ 첫째, 취업자 비율의 구조적 하락.

- 인구 고령화 시대에 취업자 비율은 상반된 두 가지 힘이 작용. 한편으로는 거대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일하지 않는 노년층이 팽창해 취업자 비중을 크게 떨어뜨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 세대, 특히 여성의 노동 참여 의지가 과거보다 강해 취업자 비율을 위로 밀어 올리는 세대교체 효과. 하지만 청년층의 강한 노동 의지만으로는 은퇴하는 노년층의 빈자리를 채우기에 턱없이 부족.
- 결과적으로 OECD 전체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은 2023년 48.1%에서 2060년 46.2%로 1.9%p 감소할 전망이며, 스페인, 슬로바키아는 10%p 급감할 것으로 예측.

\* 한국 -8.1%p 감소 전망 (인구구조 -7.8%p, 세대교체 효과 -0.3%p)

**Figure 2.6. The share of employed persons in the overall population is projected to decline almost everywhere**

Projected changes in the employment-to-population ratio, by channel, 2023-60, baseline scenario, percentage poi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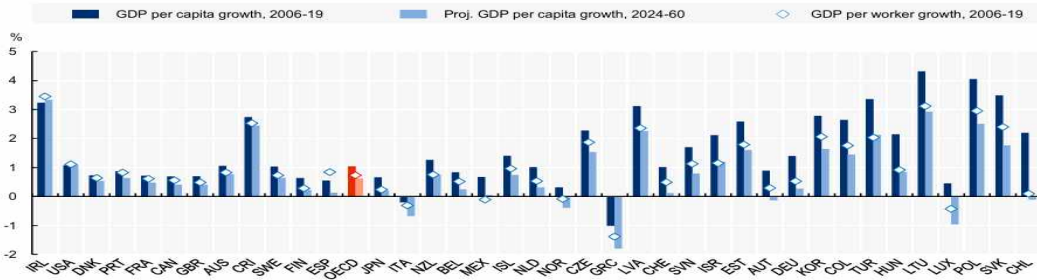
○ 둘째, 경제 성장률 40% 둔화와 1인당 GDP 14% 하락

- 미래의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2006-2019년 수준에 머문다고 가정할 때, 취업자 비율 감소는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 상실로 이어짐. 보고서의 기준 시나리오에 따르면, OECD 지역의 연평균 1인당 GDP 성장률은 2006-2019년 1.0%에서 2024~2060년 0.6%로 약 40%가량 급감.
- 이러한 성장 둔화가 수십 년간 누적되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2060년 1인당 GDP 성장률은 과거의 성장 추세가 유지되었을 때보다 14% 낮아짐. 즉 세대 전체의 경제적 파이가 그만큼 쪼그라든다는 의미.

- \* 한국 2006-19년 인구 1인당 GDP 증가율 2.8%, 취업자 1인당 GDP 증가율 2.1%
- 2024-60년 인구 1인당 GDP 증가율 전망치 1.6%

**Figure 2.7. Demographic trends will result in a dramatic slowdown of GDP per capita growth**

Recent and projected annual GDP per capita growth, baseline scenario, percentages



Notes: Projected real GDP per capita growth obtained assuming the same growth of GDP per worker as in 2006-19 and the baseline projection scenario for the employment-to-population ratio. Countries ordered by the size of the average projected growth slowdown between 2006-19 and 2024-60. 2006-18 for Australia, 2013-19 for Chile, 2015-19 for Colombia and 2007-19 for Korea instead of 2006-19. OECD: Weighted average of OECD countries. GDP: Gross Domestic Product.

- 셋째, 성장의 견인차였던 노동 투입의 마이너스 전환.
  - 과거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노동 인구가 경제 성장을 이끄는 강력한 플러스 요인이었음. 그러나 앞으로는 이스라엘, 멕시코, 튀르키예 등 인구 구조가 상대적으로 젊은 극소수 국가를 제외한 거의 모든 OECD 국가에서 노동 투입이 성장을 잡아먹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바뀔.
  - 특히 한국을 비롯해 칠레, 콜롬비아, 그리고 다수의 동유럽 국가들은 1인당 GDP 성장률이 과거보다 무려 1%포인트 이상 폭락하는 큰 충격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 한발 더 나아가 그리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같은 국가들은 노동 투입의 심각한 감소와 부진한 생산성 탓에 아예 연평균 1인당 GDP 성장률 자체가 마이너스로 추락할 위험마저 경고되고 있음.
- (종합) 노동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거나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도록 돕는 강력한 정책적 개입이 없다면, 인구 고령화라는 구조적 변화만으로도 미래 세대의 경제적 풍요와 국가의 역동성은 심각하게 위협받는다라는 사실을 수치로 확인

### 2.3 미활용 노동 자원 동원을 통한 잠재적 이익

#### 1. 생산성 향상만으로는 역부족 (2.3.1절)

- 인공지능(AI)이나 자동화 기술의 발전이 노동 생산성을 높여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줄어드는 노동력을 완전히 대체하여 예전의 성장률을 회복하기 어렵다. 더욱이 근로자 1인당 노동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며, 기후 변화 등 생산성 증가를 저해할 다른 요인들도 존재한다.
- 경제성장을 유지하려면 숨어 있는 '미활용 노동자원'을 적극 노동시장에 끌어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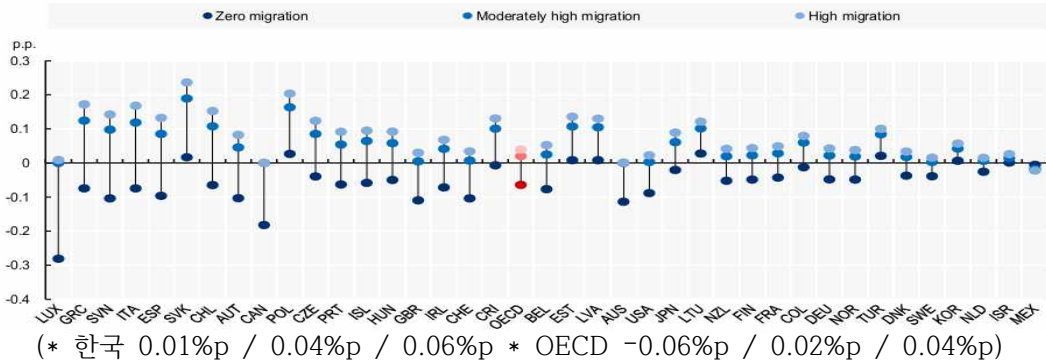
#### 2. 3가지 숨겨진 노동 자원 동원 전략 (2.3.2절)

-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책이 중요하긴 하나, 출산율을 대체출산율 수준으로 되돌리기도 어렵고, 새롭게 태어난 아이들이 노동인구로 성장하기까지 20년 이상 걸리므로, 당장의 고령화 파도를 막을 단기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대신 다음 세 가지 집단에 주목한다.

- 1) **이민자 확대:** 이민자 수용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나, 과거의 역사적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대규모 유입이 없다면 판도를 바꾸는 핵심 열쇠가 되기는 어렵다. 가장 개방적인 상위 25% 국가 수준으로 이민을 늘려야 유의미한 성장 효과가 나타나지만, 대규모 이민은 정치적 반발이나 막대한 사회적 통합 비용을 동반하는 한계가 있다.

**Figure 2.8. Increasing net migration rates may have a moderately beneficial effect on GDP per capita growth in many count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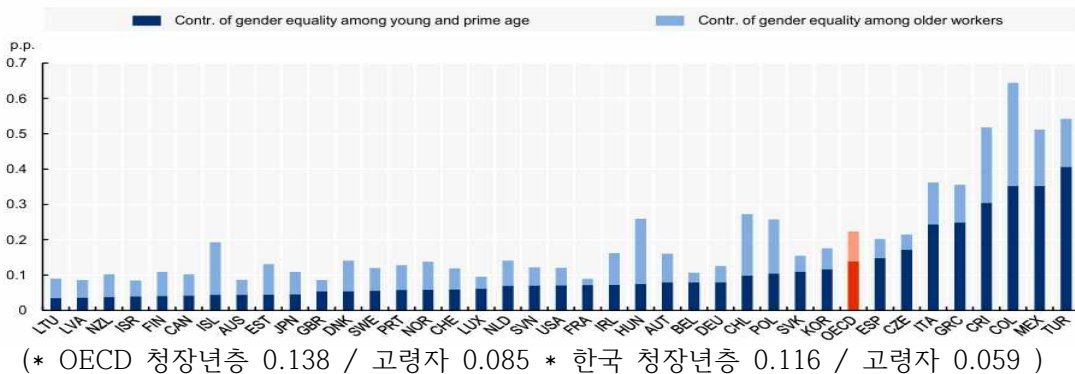
Percentage point difference in average annual GDP per capita growth: baseline vs. alternative migration scenarios, 2024-60



- 2) **성별 고용 격차 해소:** 여성과 남성의 고용률 및 노동시간 격차를 줄이면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잠재적 이익의 3분의 1 이상이 청년층이 아닌 55세 이상 고령 여성의 고용 격차를 줄이는 데서 나온다는 사실이다. 이를 실현하려면 여성이 과도하게 짊어진 무급 가사 및 돌봄 노동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보육 및 노인 돌봄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수적이다.

**Figure 2.9. Closing the gender gap in employment can deliver large growth divide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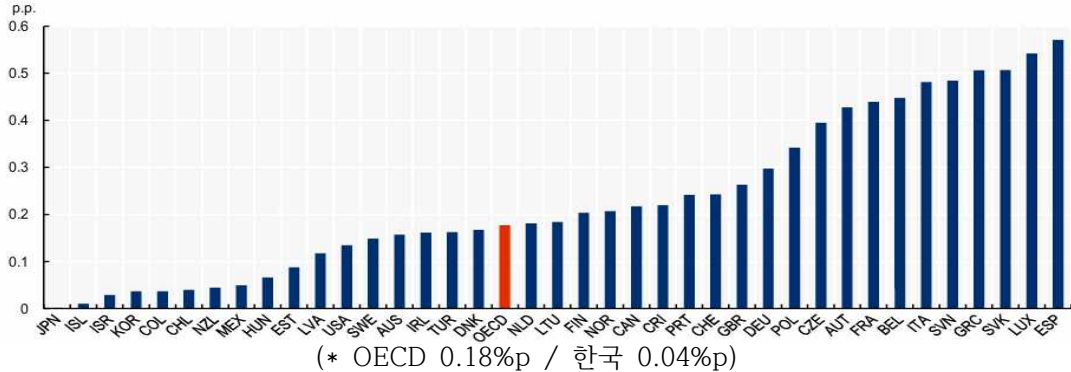
Percentage point difference in average annual GDP per capita growth: baseline vs. gender equality scenarios, contributions of different age categories, 2024-60



- 3) **건강한 고령층의 노동 시장 참여:** 가장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되는 그룹이다. 고령층의 노동시장 이탈(은퇴) 시기를 늦춰 OECD 상위 10% 국가들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이들의 남녀 고용 격차까지 줄인다면, OECD 전체의 연평균 1인당 GDP 성장률을 0.26%p 방어할 수 있는데, 이는 청장년층의 성별 격차를 줄이는 것보다 2배나 큰 경제적 효과이다.

**Figure 2.12. Raising employment of older people could lead to large gains in GDP per capita growth in many countries**

Percentage point difference in average annual GDP per capita growth: baseline vs. older workers scenario, 2024-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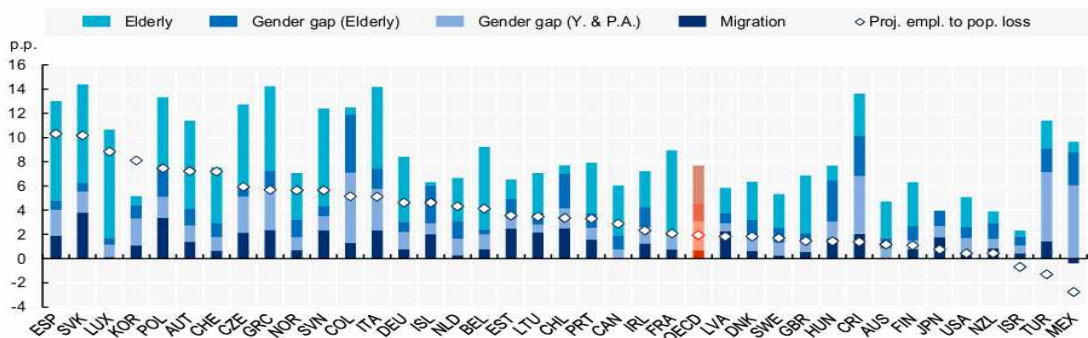


**3. 정책들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2.3.3절)**

- 이상 3가지 전략은 어느 하나만 선택할 것이 아니라 톱니바퀴처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현실적인 장벽 때문에 세 가지 집단의 잠재력을 100% 모두 끌어내기는 힘들겠지만, 각각의 목표치를 3분의 2(약 66%) 수준까지만 달성하더라도 인구 고령화로 인해 증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1인당 GDP 성장률 손실분의 약 70%를 거뜬히 상쇄할 수 있다.
- 인구구조 변화에 맞서 국가의 생활 수준을 지키려면 이민자 수용, 여성 고용 확대, 건강한 고령층의 계속 고용을 결합하는 '포괄적인 노동 자원 동원 전략'은 선택이 아닌 필수.
- 이를 방치하면 갈수록 줄어드는 노동 인구가 늘어난 노년층 부양을 모두 책임져야 하므로, 청년 세대에게 막대한 경제적 짐이 전가되는 심각한 세대 간 불공정 문제를 낳게 될 것.

**Figure 2.13. A comprehensive strategy for mobilising labour resources can avoid the fall in employment-to-population ratios**

Potential gains in employment rates from combining various scenarios, 2024-60, percentage points



<참고>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 감소 전망치	이주	성별격차		고령자	3전략 대응	비고
			청장년	고령자			
OECD	1.93	0.68	2.42	1.49	3.09	7.68	(+)
KOR	8.11	1.09	2.22	1.12	0.70	5.13	(-) 유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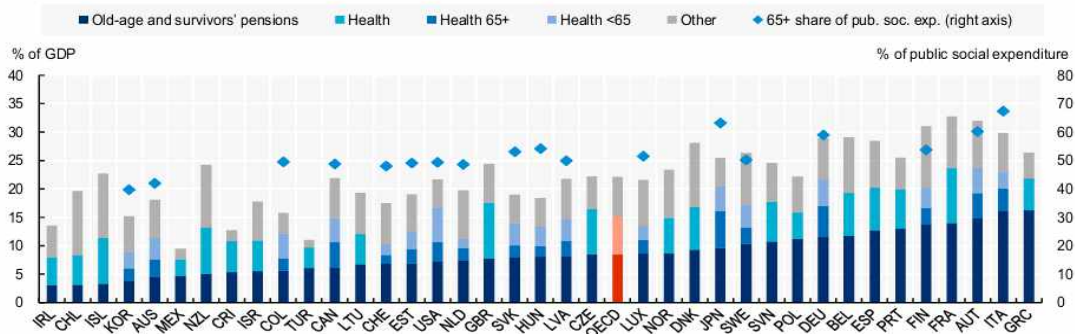
\* OECD : 고령자 > 청장년 성평등 > 고령자 성평등 > 이주

\* 한국 : 청장년 성평등 > 고령자 성평등 > 이주 > 고령자

## 2.4 세대 간 생활 수준의 불평등

Annex Figure 2.A.10. Pensions and health account for the bulk of public social expenditure

A. Share of public social expenditure in GDP by type and by age,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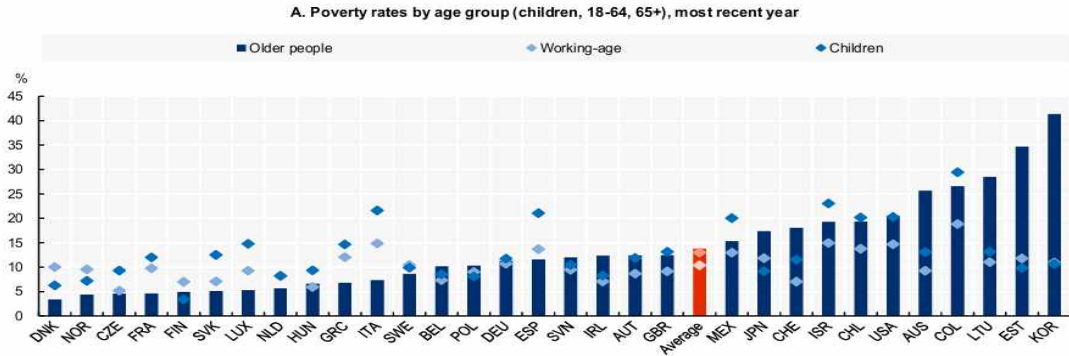
(\* OECD 노령연금 8.53%, 의료지출 6.64%, 기타 7%)

(\* 한국 노령연금 3.76%; 의료지출 5.1%; 기타 6%, 공적사회지출에서 65+ 비중 39.7%)

- 줄어드는 청년 노동 인구가 늘어나는 노년층의 연금과 의료비를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세대 간 자원 분배의 격차를 세 가지 핵심 차원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첫째, 기성세대와 청년 세대 간의 엇갈린 소득 증가 궤적. 1990년대 중반 이후, 55-64세의 고령 노동인구와 65세 이상 노년층의 가처분 소득은 25-34세 청년층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해 왔다.
  - 베이비붐 세대(1950년대~60년대 초반 출생)는 과거 경제 호황기의 높은 노동 생산성 증가 혜택을 누리며 생애 전반에 걸쳐 가파른 소득 증가를 경험했다.
  - 반면 1980년대 이후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2000년대 초반 이후의 저성장 기조 속에서 노동 시장에 진입한 탓에, 이전 세대들보다 소득 증가 곡선이 훨씬 평탄해졌으며 20대와 30대 시절 실질적인 소득 성장을 누리지 못했다,
- 둘째, 자산(Wealth) 시장 호황으로 인해 극명하게 벌어진 세대 간 부의 격차. 세대 간 격차는 매월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그동안 축적해 놓은 자산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55세 이상 가구가 보유한 순자산은 25~34세 청년 가구보다 평균 6배나 많다,
  - (\* 한국: 25-34세 37, 55-64세 127, 65세+ 85 <3.5배> \* OECD : 25 /153 /147 <6배>)
  - 기성세대는 과거 주택 가격이 저렴했던 시기에 집을 사서 수십 년간 이어진 자산 시장 호황의 엄청난 수혜를 입었다.
  - 반면 오늘날의 청년층은 치솟은 집값과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자산 축적의 장벽에 부딪혔으며, 지난 30년간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비율은 크게 하락했다,
  - 더욱이 기성세대는 길어진 수명에 대비하거나 상속을 목적으로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쥐고 있는 경향이 강해, 부의 세대 간 쏠림 현상은 더욱 굳어지고 있다.
- 셋째, 노년층에서 청년층과 아동으로 옮겨간 빈곤의 위험. 과거에는 노년층이 빈곤에 가장 취약했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노년층의 빈곤율은 하락한 반면 그 위험은 청년과 아동에게로 전가되었다,

- 이는 여성의 노동 참여 증가와 연금 제도의 성숙 덕분이기도 하지만, 과거의 연금 개혁이 기성세대의 혜택은 보호(기득권 인정)하면서 개혁의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집중시킨 측면도 영향을 미쳤다.
- 특히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까지 고려하면 격차는 더 벌어지는데, 자가 거주자가 많아 주거비 부담이 적은 노년층과 달리 청년층은 월세나 대출 원리금 등으로 가처분 소득의 막대한 부분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Figure 2.19. In most countries, older people are less likely to live in poverty than children, and the relative poverty risk has declined**



○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인구 고령화로 인해 늘어난 사회적 부양 부담을 청년 세대에게만 무겁게 지우는 것은 심각한 세대 간 공정성 문제를 야기한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 소득에만 의존해 복지 재원을 조달하던 방식을 재검토하여, 상속세나 보유세 등 자본 및 자산에 대한 과세 비중을 높임으로써 조세 부담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 아울러 보육이나 가족 지원 등 청년 세대의 출발을 돕는 생애 초기 투자를 대폭 늘려 세대 간 혜택의 균형을 맞추어 나가야 한다.

2.5 결론 및 맺음말

- 첫째, '생산성 향상'에만 의존하는 전략의 위험성과 미활용 노동자원 동원의 절대적 필요성.
  - 수명 연장과 출산율 하락으로 인해 향후 35년간 노동 투입은 그동안 경제 성장을 이끌던 '플러스 요인'에서 성장의 발목을 잡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전락할 것. 이를 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불확실한 전략.
  - 따라서 숨겨진 노동 자원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그중에서도 '건강한 고령층'의 고용을 늘리는 것이 가장 잠재력이 큼. 만약 고령층의 노동 시장 이탈률을 우수 국가 수준으로 낮추고 고령층 내 성별 고용 격차까지 줄인다면, 고령화로 인해 증발할 GDP 성장률 하락분의 약 60%를 방어할 수 있음
- 둘째, 세대 간 공정성의 회복.
  - 건강한 고령층을 비롯한 미활용 노동 자원을 충분히 동원하지 않고 경제를 유지하려 한다면, 줄어든 청년 세대가 늘어난 노년층을 부양하기 위해 더 많은 생산과 세금 부담을 떠안

아야 함. 이는 과거 경제 호황기에 자산을 축적하며 혜택을 누린 기성세대와 비교할 때, 세대 간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매우 불공정한 결과를 낳고 사회적 결속력을 해치게 됨

- 셋째, 구체적 해법을 찾기 위한 향후 과제(3, 4, 5장 예고). 고령층이 노동 시장에 단순히 오래 머무는 것을 넘어 능력을 발휘하며 일할 수 있게 하려면, 인센티브, 고용 가능성, 일자리 기회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
- 3장 (인센티브와 일자리 질): 고령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의 고용 문화를 바꾸는 방법을 다룸. 특히 60대 이후의 고용 궤적을 결정짓는 핵심 시기인 50대 중반(mid-career) 노동자들에 대한 조기 지원이 중요
- 4장 (평생 학습과 진로 상담): 나이가 들수록 정보 처리 능력이나 신체 능력이 떨어지고 기존 기술이 쓸모없어지는 문제를 다룸.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근로 생애 전반에 걸친 평생 학습(Lifelong learning)을 장려하고 진로 상담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
- 5장 (노동 이동성 강화): 나이 든 노동자일수록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job-to-job mobility)하는 비율이 떨어져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을 더디게 만들 수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장년층이 더 높은 생산성을 가진 일자리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가로막는 노동 시장의 병목 현상을 어떻게 풀 것인지 논의

## II. 김유선(2025),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향: 압축성장에서 축소사회로”, 『다중위기와 노동운동』, 제4장

### 1. 압축성장에서 '축소사회'로의 급변 (인구구조 전망)

- 한국은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이미 2020년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를 넘어서는 인구 자연 감소에 돌입,
-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이대로라면 2072년에는 한국의 총부양비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아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부양의 짐을 지우게 됨.

### 2.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 (저출산의 근본 원인)

- 저출산은 단순히 육아 비용이나 보육 시설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고용·주거·교육·경쟁 등 사회적 모순이 총체적으로 누적되어 나타난 '복합적 사회현상'.
- 한국의 결혼 시장에서는 청년 남성이 안정적인 고용(정규직)과 적정 임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혼의 문턱조차 넘기 어려움.
-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과도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생존 경쟁의 압력이 결혼과 출산을 합리적으로 포기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

### 3. 축소사회가 불러올 파장 (인구 위기의 영향)

-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노동공급과 소비수요를 위축시켜 경제성장률을 가파르게 끌어내린다.
- 효과적인 대응이 없다면 2050년대에는 추세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할 위험이 크다. 더 불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복지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학령인구와 병역 자원 급감, 지방 소멸 현상과 세대 간·지역 간 불평등이 극심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 4.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완화·적응·구조개혁의 3원 조화)

- 지금까지 정부 대응은 임신, 출산, 보육료 지원 등 기혼 부부의 현금성 비용 경감에만 머물러 근본적인 원인을 고치는 데 실패했다. 사회적 연대에 기초한 <적응 + 완화 + 구조개혁>이라는 입체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 1) 적응 정책: 과거의 무한 성장 패러다임을 버리고 '인구 감소와 저성장'을 새로운 시대의 표준으로 담담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 고령자, 외국 인력의 고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고령층의 자산과 근로 능력 유무에 맞춘 정교한 노인 빈곤 대책을 마련하여 축소 사회에 정착시켜야 한다.
- 2) 완화 정책: 시기별 부문별로 충격의 속도를 조절하고 불균형을 완화
- 3) 구조개혁 정책: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주택 가격 하향 안정화, 수도권 집중 완화 등 우리 사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이 필수적

### 5. 맺는말: 노동운동의 역할

-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기에 노동조합은 자기 회사 직원들의 이익만 지키려는 기업별 교섭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피해가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초기업(산업·지역) 단위의 사회적 교섭과 연대를 통해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대한민국이 맞이한 인구 위기는 단순히 '머릿수가 줄어드는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그동안 압축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불평등과 각자도생'의 결과물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안정적인 일자리 확충'과 '사회적 연대'를 중심에 둔 국가 대개조 수준의 구조개혁만이 유일한 해법

III. 김유선(2026), "홀로 선 대한민국: 1인 가구 시대의 도전과 미래",  
『다중위기와 노동운동 II』 제5장

- 1인 가구의 급증은 단순한 인구 현상을 넘어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새로운 엔진'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실증 데이터로 규명한 글

1. 새로운 표준이 된 1인 가구와 대표 집단의 변화

- 2014년 17.1%였던 1인 가구 비중은 2024년 30.0%로 급증하여, 이제 전통적인 4인 가구를 밀어내고 우리 사회의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새로운 표준)가 되었다.
- 주목할 점은 구성의 변화다. 10년 전만 해도 1인 가구의 다수는 '노인 여성(34.9%)'이었으나, 비혼과 만혼이 늘어나면서 2024년에는 '중년 남성(35.1%)'이 1인 가구의 새로운 대표 집단으로 자리 잡았다.

2. 고용·소득·자산·주거의 다층적 불안정과 빈곤

- 1인 가구의 삶의 기반은 4인 가구에 비해 매우 취약하다.
  - 고용 불안: 1인 가구의 무직 및 비경제활동 비율은 32.3%로, 4인 가구(6.7%)의 무려 5배에 달할 정도로 고용 상태가 열악하다.
  - 소득과 자산 빈곤: 1인 가구의 절반 가까이(48.0%)가 소득 하위 20%에 쏠려 있으며, 자산 역시 43.8%가 하위 20%에 집중되어 있다.
  - 주거 불안: 1인 가구 10집 중 4집(40.6%)이 매월 주거비를 지출해야 하는 월세에 거주하고 있다.
- 결과적으로 2023년 기준 1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0.6%에 달해, 10명 중 4명이 우리 사회 중위소득 절반에도 못 미치는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

3. 불평등을 가속하는 '새로운 엔진'

- 가장 심각한 문제는 1인 가구화 자체가 불평등을 증폭시키는 원인으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패널 데이터 분석 결과, 다인 가구에서 1인 가구로 상태가 변할 때 개인의 고위 능력과 무관하게 가구 소득은 평균 37.4%, 자산은 평균 32.3% 감소하는 강력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된다.
- 과거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주로 성별이나 학력 차이에서 비롯되었으나, 지난 10년간 이러한 전통적 요인의 영향력은 줄어든 반면 '가구 구조(1인 가구 여부)'가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키우는 새로운 핵심 동력으로 부상했다.

4. 2050년 미래 전망과 정책적 과제

-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2050년에는 1인 가구 비중이 전체의 41.2%에 달할 것이며, 특히 1인 가구주의 절반 이상(50.7%)이 65세 이상 고령층이 될 전망이다.
  - 이는 머지않은 미래에 고립과 빈곤 위험에 처한 독거노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을 의미
- 과거의 전통적인 '4인 가구 중심'의 낡은 사회 정책 패러다임을 폐기하고, 청년의 독립, 중장년의 미혼·이혼, 노년의 사별 등 생애 전환기에 발생하는 경제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1~2인 가구 맞춤형 사회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